

시선

사설

명백한 표절에도 '면죄부' 근간부터 흔들린 '연구윤리'

'법'이란,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단일한 사회체계를 구성하고 살아감에 있어 해당 사회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행위 규범을 '강제력' 아래 둑어둔 것이다. 법은 사회구성원의 보편적이고 암묵적인 합의 아래 형성된 강력한 권위를 위임받고 있으며, 구성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이 법의 '권위'가 법의 지배원칙을 지지한다. 법과 인접한 개념인 '도덕' 역시 행위규범이지만, 그 위반이 윤리적 비난을 초래할 뿐 강제력을 동반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도덕은 법보다 큰 범주의 행위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환연히,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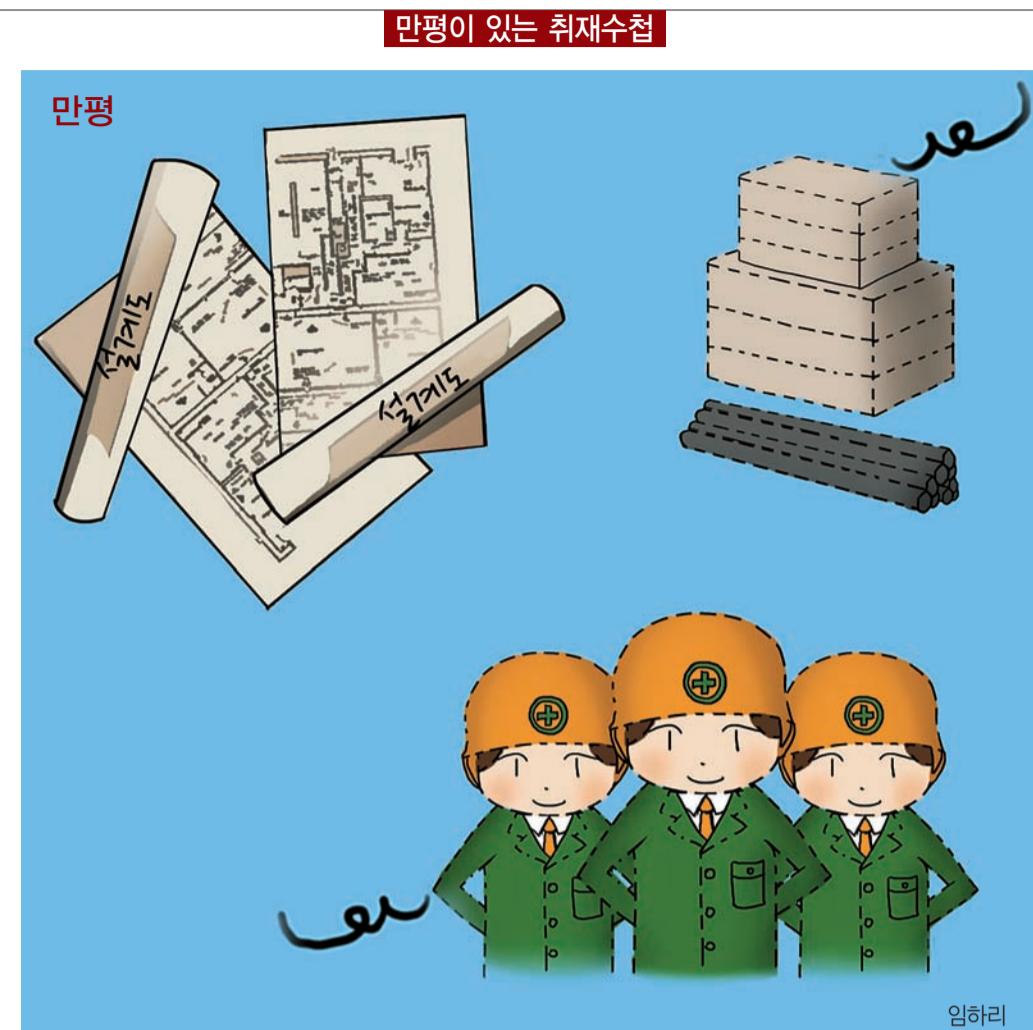
법이 지나는 강제력은 사회구성원에게 위협을 주고자 함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구성원의 예기(豫期)를 가능케 하는 일종의 수단이다. 항상성을 지나는 법의 강제력 앞에서 개개인은 자신의 특정한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미리 의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개개인의 예기는 일정한 '사회질서'를 형성한다.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의 박사학위논문 표절문제를 둘러싼 우리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결과가 큰 우려를 낳는 것은, 이번 판정이 이러한 '법'의 의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표절'이라고 확인된 논문에 대해 '1998년 논문 작성 당시에는 본교(우리학교)에 연구윤리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인용에 대한 경각심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이번 판정은 최소한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이번 판정은 연구윤리문제에 대한 각금의 시대적 합의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칙'을 제정·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 검증시험을 5년으로 규정했다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학계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공소시효 5년 부분을 삭제한 바 있다. 이는 표절 건에 대해 학계 전반이 '현존하는 모든 논문이 검증대상'이라는 수준으로 큰 경각심을 갖추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이번 판정은 '사회구성원의 보편적이고 암묵적인 합의' 지점을 벗어난 '자의적 판단'이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이번 판정은 '경희대학교 연구윤리관리 규정'의 대내외적 권위와 신뢰성을 크게 흔들어놓았으며, 이를 통해 연구윤리 관련 학내 질서는 그 근간부터 흔들릴 위험에 처해지게 됐다. 명백한 표절 건에 대한 '강제력의 항상성'에 예외 사례를 둘로써 '경희대학교 연구윤리관리 규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신뢰성에 큰 흠결을 갖게 된 것이다.

이번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공개적으로 내보낸 '신호', 즉, '현존하지 않는 규정, 즉 현행 규정의 하점에 대한 위반은 고의성 여부와 별개로 적법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메시지가 어떤 응답을 불러올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권위를 잃은 법이 더 이상 법의 지배원칙을 지지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우리학교의 연구윤리는 이제 어디로 흐르게 될까. 이번 문제는 이제 판정결과 그 자체보다는 '판정 그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일이 됐다.



이주의 주제 - 경희교육포럼과 후마니타스 칼리지

학교 발전을 위해 이상 아닌 현실 직시할 때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이번 교육포럼을 취재하면서 들은 이야기들은 고개를 주억거리게 할 것들이었다. '교육과 연구가 상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이 영감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취업에 대한 적극적이면서도 창조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등등. 모두 이뤄지기만 한다면 우리학교가 '문화세계의 창조'를 주도하는 것은 먼 얘기가 아니라고 느껴질 만큼 솔깃한 말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아직 냉혹하다. 애심차게 내놓은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커져가고 취업률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의 비전에 대해 얘기해왔음에도 '문화세계의 창조'가 아직까지 먼 얘기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 중·장기적인 발전을 구상하기 위해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꽤 많이 마련해왔다. 가장 뜨거운 회의인 후마에 대해서는 간담회, 만족도 조사, 포럼 등 다양한 방식의 논의자리를 수차례 마련했다. 교육역량 전반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교육포럼을 비롯해 미래리포트 출범, 총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이런 노력들에 비례해 학교

의 발전방향에 관해 구성원들이 제시한 방안도 많이 등장해왔다. 그러나 그 주장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너무나 이상적인 이야기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번 교육포럼에서는 '제도'란 단어가 유독 많이 등장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융합교육의 발전을 위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열린 후마 간담회에서도 교양교육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방안이, 총장과의 간담회에서는 학생복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교수를 비롯한 구성원들은 가지각색의 발전방향을 제안하면서도 그 해결책은 '제도적 지원'으로 귀결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어떤 교육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를 건드리는 순간 '예산'이 요구된다. 각종 대회테이블에서 제시된 안건만 해도 손에 꼽을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요구될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학교는 현 행정을 진행하는 데만 해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불멘소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각자가 주장한 방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사안인지를 고민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

학교 발전방향 논의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안들이 쏟아지면 본래 목적의 흐트러짐을 수 있다. 때로는 이상을 포기하더라도 목적 실현을 위해 중지를 모으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실적 대안의 마련을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교수단체 대표 선출과정 '신뢰'·'정당성'에 의문

세시봉

권오은 (편집장)



#1. 대학주보 편집장으로 일하다보면 종종 곤란할 때가 있다. 경희대라는 사회에서 크고 작은 갈등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 중에서도 양 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도 다양하지만, 둘 모두 근거가 타당한 경우, 기사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기계적 중립을 지키자면 어렵지 않겠으나 그것이 대학주보가 추구해온 사명은 아니기 때문이다.

#2. 더 곤란할 때가 있다. 양 측 모두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다. 심지어 '그 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자'가 구성원을 대표해 학교를 운영해나가는 주요 주체 중 하나라면 한숨부터 나온다. 가령, 이번 교수대표 선출과정이 그런 경우다. 교수의회는 이번에 의장을 겸임하는 국제지회 지회장에 대한 찬반투표를 제외한 나머지 입후보자를 모두 무투표 당선 공고했다. '무투표'라니 아연하다. 교수의회 측에서는 '관행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임원이 단독 입후보했을 경우 무투표 당선 시킨다'라고 설명했으나, 다른 학내 대표자 임원선거가 단선일 경우에도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점을 생각해보면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서울캠퍼스 교수의회도 매한가지다. 현재 그 독립절차에 대한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지향한다고 말하면서 처진 신임의장 선거를 '이메일 회신'이라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무릇 '전자투표'는 선거인본인 인증 및 보안성 문제에 대해 철두철미한 장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서울캠퍼스 학생대표 선출과정에서 도입된 전자투표 역시 매우 엄정한 과정 속에 진행됐다. 이럴진대, 본인 인증시스템이나 객관적인 보안시스템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이메일 회신 투표시스템'을 과연 '전자투표'라는 이름 하에 공적 시스템으로 용인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투표기간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지 않은 것도 좀체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3. 대표자의 힘은 그가 대표하는 구성원들의 '신뢰'와 선출 절차의 '정당성'에서 비롯한다. 이번 선거는 과연 이 두 가지를 획득하기에 적합했는지 궁금하다. 이는 교수사회의 오로한 권리인 만큼 교수들이 고민할 데로 남겨두겠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선출'된 교수 대표가 다른 구성원 대표들과 동등하게 의견을 나눈다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까지 감추기 어렵다. 교직원노동조합 선거에서 마지막 개표 순간까지 절차의 정당성을 치열하게 토론했던 모습을 기억하는, 그리고 공정 감시단까지 운영해가며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서울캠퍼스 학생대표 선거를 지켜본, 더불어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제캠퍼스 학생대표선거를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4. 교수사회가 과열된 갈등을 진정시키고, 그들이 늘 강조해온 '원칙'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그들의 날 선 '지성'이,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을 수호한다면, 그 기본을 향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하지만 명백하게도, 현재의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올바른 길을 향하는 시작은 스스로를 '정립'하는 것부터다.

알림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www.facebook.com/khunews

'대학·학과' 선호도 조사 학생 8위, 학부모 9위 '취업률' 영향 크다

미디어 여론동향 2014. 11. 24 ~ 11. 28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온라인 커뮤니티 '쿠플라자'에는 '온라인 강의 들어보신 분 학점 받기 어렵나요?'(2014. 11. 24)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글쓴이는 처음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다면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 강의가 학점 받기가 수월한지 질문했다. 댓글로 "'출석과 과제를 완벽하게 했는데 C+가 나왔다며 Pass/Fail 과목이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국국제경영학회는 제28대 회장으로 우리학교 문

병준(경영학) 교수를 선출했다고 24일 밝혔다.(한국 국제경영학회 새 회장에 문병준 경희대 교수/연합뉴스, 2014. 11. 24) 한국국제경영학회는 국가와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제 경영 사례를 연구하는 학술 연구단체로 지난 1989년 설립됐으며, 현재 약 6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문 교수는 서울대에서 경영학 학·석사, 미국 코네티컷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일본 국제대 경영대학원 교수, 한국마케팅과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내일신문이 진행한 세대 간 대학·학과 선호도 조사 결과 우리학교가 학생 선호도는 8위, 학부모 선호도는 9위를 기록했다.(5위 이하 대학 선호도도 달라/내일신문, 2014. 11. 26) 성적, 전공과 상관없이 20개 대학을 놓고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로 학생 중 11.9%, 학부모 중 11.5%가 우리학교를 '선호한다'고 선택했다. 학생이 우리학교보다 더 선호하는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서강대 순이었고, 학부모의 경우 상위 4개 대학은 동일했으나 이후 서강대, 한양대, 카이스트, 중앙대 순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편 '대학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학생들은 '취업률(37.4%)'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학부모들 역시 '자녀의 의사(66.5%)'에 이어 '취업률(20.0%)'을 선택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취업률'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이다.

동성제약이 지난 25일 제17회 송음 의약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송음 의약학상, 김동현 경희대 교수 피터 로스차일드 바이오가이아 대표이사 수상/쿠리뉴스, 2014. 11. 26) 수상자로는 우리학교 약학대학 김동현 교수가 선정됐다. 김 교수는 소화관 미생물과 노화, 비만, 대장염 등의 질병을 주로 연구해왔으며,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만 448건, 저서 20편으로 꾸준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소화관 미생물과 관련된 효소의 산업적 응용에 대한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송음 의약학상은 동성제약이 의약학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우리나라 약학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1998년 제정한 상이다. 수상 범위를 국내 뿐 아니라 세계로 넓혀가고 있어 세계 의약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16회까지 국내외 총 37명이 상을 받았다.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진 | 편집장 권오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주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인터넷기기)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양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